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았다…전남 '지방소멸' 가속화

이재명 정부 출범 '다시 대한민국'

<3>일자리·생활 인프라 확충 시급

'저출산·고령화' 공동체 붕괴위기
작년 소멸위험지수 '전국 최하위'
20개 시군 위험… 11곳은 고위험
"정부차원 즉각·전폭적 대응 필요"

지난 10일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면소재지 인근 도로에서 한 어르신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불고, 이대로 가믄 10년 안팎으로 마을이 다 없어질 판이제."

지난 10일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깊은 근심과 우려가 담겨 있었다.

청풍면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전형적인 산촌 지역이다. 겨우 1000명 선을 유지하던 주민등록 인구도 지난 2023년 붕괴됐다. 곳곳에 흩어진 31개 자연마을에는 사람이 떠난 뒤 세월의 흔적만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한때 마을마다 아이들로 북적였던 이곳에는 이제 학급당 인원이 3명 남짓에 불과한 초등학교 한 곳만이 남아 있다. 이는 비단 청풍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광주·전남을 비롯해서,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 대부분 지역이 '지방 소멸'이라는 망국적 위기 앞에 놓여 있다.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된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은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는 0.32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0.615)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는 수치다.

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젊은 여성 인구가 적고 노인 인구가 많을수록 지수가 낮아진다. 전남의 수치는 그만큼 아이를 낳고 키울 젊은 인구가 부족한 반면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전남의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더 뚜렷하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6.4%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20~39세 여성 인구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도 젊은 여성 인구는 23.4%나 줄었다. 전체 인구 역시 같은 기간 5.1% 감소해 179만8000명에 머물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중 순천시와 광양시를 제외한 2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1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더욱이 지난 2022년에는 나주시와 여수시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된 데 이어, 도청 소재지인 무안군과 전남 서부권의 중심 도시인 목포시마저 소멸위험지역으로 새롭게 진입했다. 행정 중심지와 지역 거점 도시마저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이면서, 전남의 인구 소멸 위기는 '농촌 문제'에서 확장해 전 지역적 과제가 되고 있다.

전남의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저출산 흐름에 더해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생활 인프라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이 취약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의료·문화시설 역시 크게 뒤처져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산율 저하와 수도권 지역과의 극심한 양극화로 인한 인구 유출이 맞물리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남아 있는 주민들마저 노쇠화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붕괴위기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역민들은 소멸을 막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즉각적이고 전폭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강민경(27)씨는 "광주도 140만명 인구선이 붕괴됐다고 하는데 전남의 소멸 위기는 말할 것도 없다.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 할 만한 일자리나 환경이 너무 부족하다"며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제대로 마련해줬으면 한다.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에 '전라남도기록원' 건립

지상 4층 연면적 1만3474㎡ 규모
공공·민간기록물 전문적 보존·관리

전라남도는 도내 중요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전문적 관리를 위해 장흥에 전라남도기록원을 건립할 계획이다.(조감도)

전남도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시·도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해 설치·운영하도록 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다.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3474㎡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학생 수 감소로 2005년 담양캠퍼스로 통합·이전된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부지에 기록원을 건립함으로써 약 20년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던 도유지를 활용하는 한편,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의 통합과 연계해 국립대와 공공기관 간 상생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기록원이 건립되면 전남도와 22개 시군에서 생산한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지역의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도 보존·관리하고 전시할 수 있다.

기록원은 군관리계획 변경, 행정안전부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 절차를 마친 후 2027년 7월부터 설계 및 공사에 들어가 2030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기록원을 통해 도민과 함께 기록물의 가치를 공유하고 활용해 우리 지역에 대해 더 잘 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ACC "亞문화중심도시 협력 강화"

협력과제 발굴·홍보 방안 논의

광주광역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11일 ACC에서 제1차 정례협의회를 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ACC 정례협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양 기관이 번갈아 개최하며 협력과제 발굴, 추진현황 공유, 공간 활용, 공동 홍보 등을 논의하는 공식 소통 창구다.

광주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 성공 개최 협조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기념행사 공동개최 △2025 광주방문의 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ACC 개관 10주년 행사 상호 홍보 협력 등을 제안했다.

ACC는 '광주방문의 해' 붐업을 위해 ACC 하늘마당 내 홍보 캐릭터 포토존 설치를 제안하고,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 개최 협조·행사차량 주차장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기념 문화행사 협력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그동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력을 이어왔다. 2023년 9월에는 ACC 내 옛 광주여고체육관을 증·개축해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를 유치·개관했으며, ACC 공간을 활용한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전시, 광주시립미술관과 연계한 '아시아예술정원' 시민체험형 교육프로그램(19~20일)을 운영하는 등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정상아 기자

'전남 외딴 산골…화순 백운마을'

▶1면서 계속 이들의 발이 돼 주는 농어촌 버스도 하루 네 차례뿐이다. 오전 2대, 오후 2대가 마을을 지난다.

오영근(69) 할아버지는 "막걸리라도 한잔 마시려면 가장 가까운 술집이 있는 이양면까지 나가야 한다"며 "당뇨와 고혈압 약을 타러 광주에 있는 큰 병원에 자주 오가야 하는데, 버스편도 적고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마을의 소멸 속도도 가파르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85명이던 주민등록 인구는 3년 반 만에 14명 줄었다. 곳곳에 빈집도 빠르게 늘고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마당에는 잡초만이 무성해 한때 산기슭까지 집을 짓고 살았다는 어르신들의 증언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이대로 가면 10~20년 사이 마을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모이는 까닭이다.

비록 열띤 선거 분위기는 없었지만,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바람만큼은 결코 어느 지역에도 뒤처지지 않는다. 21살에 가마 타고 시집와 어느덧 백운마을의 터줏대감이 된 염복남(85) 할머니의 소원은 마을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다.

"젊은 양반들이 내려와서 짝 만나고 가정 꾸리면서 살 수 있는 세상 좀 만들어줘야제. 먹고살 일도 좀 있어야 외지 사람들도 올 거 아니요. 나도 여그 시집와서 평생 살아왔는디, 이렇게 동네가 사라지믄 참 아깝고 속상하지 않겄소?"

"새 정부 기조 맞춰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설계"

전남도, 소멸위기 대응 종합전략

출생 장려·청년 정착 등 4대 축
인구전략추진센터 신설 등 추진
출생기본수당·외국인 지원 강화

전라남도의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동시에 심화되면서, 인구 소멸은 더 이상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단순한 유출 억제를 넘어, 조직 개편과 출생 장려, 청년 정착, 외국인 유입 등을 4대 축으로 한 종합 전략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호남·제주 지역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에 따르면 전남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5.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여기에 청년층의 순유출까지 지속되며 인구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2024년을 '지방소멸위기 극복 원년'으로 설정하고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국가 출생수당과 광역비자 도입 등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는 등 행정 개편까지 추진한 전남도는 지난해 7월 제13회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정책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전남형 만원주택' 등 독자적인 제도를 연이어 도입하며 저출생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에 선도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17년 연속 광역지자체 중 1위를 지켰고, 영광·강진·해남 등 3개 군은 전국 시군 단위 출산율 10위권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최다 운영, 난임시술비 전면 지원 등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도 연계해 출산과 양육을 연계한 지원에도 앞장섰다.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 아래 5개 분야 100개 과제를 추진하며,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지방소멸대응기금 전국 최다인 1186억 원을 확보하는데도 성공했다.

출생수당 신설 외에도 귀농어귀촌인을 위한 체류형 지원센터 확대, 만원 세컨하우스 보급, 청년부부 결혼축하금과 주거비 지원, 청년창업·취업·문화복지 정책 강화 등 정주인구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졌다. 또 외국인 주민 통합을 위한 '광역비자' 도입, 종합지원센터 확대,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 대상 상담·교육·자녀지원까지 포함하는 외국인 통합정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조직 강화 △인구 증대 △청년 일자리 △이민·외국인 통합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구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전략추진센터'를 신설해 전남도의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을 설계할 예정이다.

인구 증대 분야에서는 전남 출생기본수당을 비롯한 출산·양육 퍼블릭케어를 통해 저출생 추세를 극복하고,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시책'을 발굴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청년 일자리 분야는 청년특화구역 조성, 청년희망일자리, 희망펀드 등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이민·외국인 통합 분야에서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확대와 산업별 맞춤형 인재 유입을 위한 전남형 비자제도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저출생 위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나선 만큼 전남도도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며 "지속가능한 인구구조 재편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